

차정부 '지역행복생활권' 성과 어렵다

지자체간 연계·협력 시스템 부족, 인센티브 미약

전발연, 10대 문제점 지적... 주민들 "보완·개정 시급"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이 연계·협력 시스템 부족, 예산 발굴 및 집행 체계 미흡, 사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미약 등으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민들도 현행 국가균형발전법 보완·개정이나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12일 전남발전연구원 조상필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 추진방안'은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선진적인 규정만 담겨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세부 지원 지침이 불명확하며, 인센티브도 미약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역행복생활권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중요성 미인식 ▲기초조사 및 분석 부족에 따른 한시적 사업 제시 ▲생활권 간, 지역 간 격차는 심화 우려 ▲서비스공급 권역 성격에 불교해 자족적·완결형 가능 미약 ▲지역행복생활권 내 서비스 공급 기준 및 목표 불투명 등 조 연구원이 제시한 문제점만 10가지에 이른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중요성 미인식 ▲기초조사 및 분석 부족에 따른 한시적 사업 제시 ▲생활권 간, 지역 간 격차는 심화 우려 ▲서비스공급 권역 성격에 불교해 자족적·완결형 가능 미약 ▲지역행복생활권 내 서비스 공급 기준 및 목표 불투명 등 조 연구원이 제시한 문제점만 10가지에 이른다.

조 연구원은 유럽연합·일본·영국 등 외국 사례에서 볼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

자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적 절차와 안정적인 재원의 마련, 연계·협력 추진기구의 역할 강조와 추진절차 체계화, 일상적인 정보·교류 적극 권장 등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은 근간으로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목적, 추진주체, 추진방법, 재원 확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전남발전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위해 실제로 구례·곡성·담양에 거주하는 주민 249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30일부터 5월 1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 분석하기도 했다.

설문에 응한 주민들은 연계·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44.9%)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지역상호 간의 이해 및 신뢰(31.1%), 권역 내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의지(8.8%), 지역 간 갈등의 중재와 조정(6.5%) 등이 필요하

다고 답했다.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27.8%가 사업의 한시적 체계라고 답했으며, 지자체 간 형식적·물리적 연계·협력(26.7%),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업 발굴(9.9%), 시·도의 조정 및 역할 부족(9.7%), 연계·협력의 지원 부족(6.4%), 지역발전위원회의 조정 및 역할 부족(5.6%) 순으로 지적됐다.

조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과 지역협력권은 지역 간 연계·협력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너무 빈약하다"며 "지역 간 상생협력 촉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발굴과 연계·협력 방식의 촉진, 중앙정부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공서비스 공급이용의 다중 네트워크 형성 등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2일 오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감 당선자 상경례 및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자(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가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위기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

폐지안 이르면 다음달 발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계획'을 조만간 확정해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일원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방안 등 지방자치발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법 12조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통합하게 되면 교육자치가 자치단체장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되고, 광역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다.

국무회의의 보고를 앞두고 지금까지 위원회가 논의한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방안은 시·도 교육감은 주민 직선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천위원회 등이 심사를 벌여 적격자를 뽑게 된다.

위원회는 애초 5월말~6월에 종합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발표시기가 미뤄졌다.

위원회는 '직선제를 폐지하면 교육이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교육감에게 예산과 인사의 권한을 철저히 보장하는 보완 체계도 일원화 방안

에 담았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 표시만 없을 뿐 정치에 휘둘리고 있고 자격요건도 엄격하지 않아 제대로 후보 검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교육계나 이해당사자 등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인 연계 강화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교육감 선거 결과 직선제 폐지론이 부상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 일원화 방안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사무·국가사무 구분 ▲중앙권한·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특별·광역시 자치기구·군의 기능 개편 ▲근린자치 활성화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애초 5월말~6월에 종합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발표시기가 미뤄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장휘국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리에 맞지 않다"

진보교육감 5인 회동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12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당선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희연(서울), 김병우(충북), 이청연(인천), 민병희(강원) 등 진보교육감 당선자 4명과 함께한 상경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당선자는 "축구 경기에서 지나가 앞으로 경기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교육감 선출제도가 변화·발전해왔는데 이제 왜 폐지하자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를 시도에 대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징계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날 상경례 자리에서는 이밖에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대입 자격고사 및 국립통합네트워크 등 대입제도 변화에 대해 진보교육감들의 한 목소리를 냈다. 진보교육감들은 또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전면 확대해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마음껏 끼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동은 장휘국 당선인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교황 8월 방한때 세월호 유가족 초청 위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8월 한국 방문 때 자신이 집전하는 미사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을 초청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12일 천주교 등에 따르면 교황은 8월 14일 입국한 뒤 18일까지 머무는 동안 충북 음성 꽃동네를 방문하고 대전 월드

컵경기장에서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와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미사를 집전한다. 서울 명동성당에서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주례한다.

교황은 특히 방한 기간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을 미사에 초청해 위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감사원, 해남군 보안등 사업 업체에 특혜 지적

전남도, 순천·영광 부당 행정행위 무더기 적발

해남군이 '에너지절약형 보안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제품 규격을 과도하게 제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급을 횡령하고 지방세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업체에 특혜를 준 영광군과 순천시의 부적절한 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해남군은 지난해 4월 A업체와 보안등 6750개를 세라믹 메탈 할라이드(CDM) 50W 램프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37억3000여만원에 계약했다.

감사원은 군이 설계내역서의 수량산출서와 특수시방서 등에 CDM 50W 램프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B사 제품으로 명시하고 구매에 설치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설계가격도 B사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가격(부가세 등 포함 31만5000원)을 그대로 적용,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군이 특정 규격, 모델, 상표를 지정해 입

찰에 부처거나 계약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규정을 어겼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남군에 관련자를 주의 조치하도록 촉구했다.

전남도는 영광군과 순천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절한 행정행위 193건을 적발했다. 도는 공무원 1명을 파면하고 11명을 징계하는 등 총 11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했으며 두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함께 35억1400만원의 재정 조치도 병행했다. 영광군의 경우 공무원 A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징수한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 수수료 3840만원을 군정 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A씨를 파면하고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토록 통보했다. 또 영광군은 지목 변경 취득세와 가설건축물 재산세 등 총 157건의 지방세 3265만원을 과세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에 적발됐다.

영광군은 지난해 6월 공개경쟁입찰 규정을 어기고 2억8657만원 상당의 의약품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학술연구용역 기구의 인건비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의 경우 지난 2012년 12월 8억4000만원의 강변도로 구조개선 공사를 발주한 뒤 1억9900만원의 추가 공사를 기존 업체와 계약해 사실상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유현석기자 chadol@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료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영골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지판널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공약가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트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